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10호

발행일: 2022. 12. 22. (목)

제400회 국회(정기회, 2022. 9. 1. ~ 2022.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폐기물(폐자원) 재활용과 순환경제
- 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다. 디지털 기반 강화
- 라.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사업 활성화
- 마. 나이 기준 통일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1. 개관

제400회 국회(정기회)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12월 8일 개최된 제14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40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 등 교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4) 데이터센터 화재 등 ‘통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평등하게 예우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촌 살리기를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8)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건강보험 운영건전성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위 학자금 ‘먹튀’를 막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사채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401회 국회(임시회)에서는 같은 법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다시 한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제400회 국회의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93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	법제사법위원회(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34인	
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1		정무위원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등 11인
15	교육위원회(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등 12인	
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	행정안전위원회(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4	행정안전위원회(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5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의원 등 10인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1인
28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정부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등 10인
3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등 10인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4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2인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의원 등 11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3인
4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등 10인
4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의원 등 10인
4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등 10인
4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48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등 10인
49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31인
5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0인
5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등 14인
5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6인
5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0인
57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의원 등 11인
5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59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6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0인	
6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 의원 등 11인	
7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 등 19인	
7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0인	
7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등 30인	
7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7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등 11인	
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2인	
76		보건복지위원회(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등 11인
78		환경노동위원회(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1	환경노동위원회(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8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2인	
8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0인	
8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응래 의원 등 10인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응래 의원 등 12인	
90		국토교통위원회(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1		여성가족위원회(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9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0인
9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2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폐기물(폐자원) 재활용과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디지털 기반 강화,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나이 기준 통일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폐기물(폐자원) 재활용과 순환경제

개요

순환경제란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경제 모델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 산업기계 재(再)제조 지원센터 구축,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순환경제 신(新)산업 아이디어 공모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자원 폐기물(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순환경제의 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이에 관한 입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고철 등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에 의해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 효율적 자원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p><u>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u></p> <p>현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 방식이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임.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한편,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p>	2022-12-08 (원안가결)
2		<p><u>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위험이 상</p>	2022-12-08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환경노동위원회	<p>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간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대형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50조에 따른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시설폐쇄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120대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과제목표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

주요내용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페펄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
- 페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m³/년 생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③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순환경제) 페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
 - 페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 및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22.下)

- **(ESG경영)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
 - *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22.7월)
 - ↳ ①ESG 공시제도 정비, ②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③ESG 채권 발행·투자활성화, ④ESG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⑤ESG 정보플랫폼 구축, ⑥ESG 전문인력 양성, ⑦공공기관의 ESG 선도
 -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 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
 - * IFRS(국제회계기준)는 ISSB(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를 설립, ESG 공시 국제표준화 추진중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환경부, 2022. 7. 18.)

1] [순환 경제]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안보'에도 기여

* <자원 안보 확보방안> △비축, △대체재, △공급선 다변화, △재활용 등

- **(플라스틱)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재활용이 쉽도록 생산을 유도***하고, 선별률을 높여**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을 확대하고 **재활용 활성화**
 - *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무라벨 생수병, 단일재질) → 기업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 감면
 - ** (공공선별장(187개) 현대화(수선별 → AI 광학선별)) '21년 9% → '26년 63%
- **(광물자원)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배터리**·태양광 패널** 등의 수거 망을 확대, 리튬·코발트·니켈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
 - * (무상수거 확대) 대형 가전(냉장고, TV 등) → 중소형 가전(밥솥 등), 부속물(이어폰 등)
 - ** 거점 수거센터(4개, 시흥·홍성·정읍대구) 구축 완료('21) → 재사용·재활용 업계에 공급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2021. 9.

[임이자 의원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2022. 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제출안: 경합법의 분리 선고 규정](#) 2021. 2.

[홍석준 의원안: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및 지자체 수거책임 강화](#) 2021. 6.

[김성원 의원안: 매립시설 관련 검사 수수료 부과근거 명시](#) 2021. 4.

[이주환 의원안: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등](#) 2022. 11.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6.30\) 발표자료](#) 환경부 누리집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설명회 발표자료](#) 환경부 누리집

[2021 환경백서](#) 환경부 누리집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12. 31.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체계이다. 그런데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 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재정정을 통한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①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여건, ②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③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보장, ④공정처리에서 공정손실율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9. 28.

- 국내 커피 소비량의 증가추세와 함께 커피찌꺼기 발생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커피찌꺼기 처리 비용을 저감하고 국제적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에 부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원료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스위스·영국은 커피찌꺼기를 바이오 에너지 연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모델이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커피찌꺼기 바이오에너지 자원화를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개선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분리배출 체계 구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커피찌꺼기 수거량을 증대하고,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 순환 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발전용·수송용 재생에너지원 원료로서의 커피찌꺼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급 가중치상향, 바이오에너지 연료 원료별 차등적 의무이행 장려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2021. 11. 17.

- 발제 I.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 과제
서용철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포럼 위원장
- 발제 II.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 방향
오세천 교수(한국열환경공학회장, 공주대학교)

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개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각종 정책의 시행,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새정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한편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법률로 주요 원자재 및 연동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소액계약, 단기계약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의 필요성이 낮거나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에는 약정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탈법행위 금지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을 통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p>	2022-12-0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과제목표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

주요내용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 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5년간, 300개)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 강화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 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2 플랫폼 경제,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위한 시스템 마련

-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추진
 -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22.下) 등을 통해 수용성 높은 방안 강구
 - 조정협의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 문화 유도 병행
 - * (예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상 대행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 (플랫폼 경제) 민간 주도 자율규제 등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 마련
 - * (예시)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마련, 상생협약 체결, 모범계약서 마련
 - 기재부·과기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보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뒷받침
 -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 등 모니터링 지속 병행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중소벤처기업부, 2022. 7. 12.)

③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다시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확실히 개선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강국의 새로운 라운드에 진입**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쪼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

- 원자재 가격,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정서 마련, 시범운영 추진** (‘22.하)
 -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23)
 - *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 요건없이 대행 협의 가능
 - ** 인센티브 예시: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정부포상 등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 지급시 반영토록 하는 근거 마련](#) 2022. 5.
[한무경 의원안 등: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2022. 11.

[납품대금 연동제,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딛다](#)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7. 25.

- ‘거래관계에서 있어서 교환되는 대가의 균형’은 계약성립과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의 핵심 전제로 작용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전히 중요함

□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연동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가격상승 정도의 기준, 연동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거래 현실과 당사자 이해의 균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관건(關鍵)이 됨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2013. 8. 1.

본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토론회](#) 국회 정책세미나 2020. 7. 2.

발제자: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토론자:

이정환(명지대학교, 교수),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정옥조(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본부장), 박종찬(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다. 디지털 기반 강화

개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초래된 준재난적 상황으로 파악하고, 부가통신서비스의 재난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많은 부가통신사업자와 시설규모·매출액 등이 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에게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2022-12-08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피해가 컸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p>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지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삭제등의 요청 경과 또는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인 카카오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p>	2022-12-08 (원안가결)
3		<p>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p>	2022-12-08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과제목표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년)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 (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디지털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23~),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 추진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과기부, 2022. 7. 15.)

4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 개요

-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AI·SW, 데이터 활용 등)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 가속화 통해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역량 강화)** 도전적 R&D 및 데이터의 연계·활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사회 전 부문에서 AI 융합
 - *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26년, 3,018억원), 10대 분야에서 難題해결 AI 프로젝트(23년)
 -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자체 시스템 구축→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유망 SW의 수출 지원 등으로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 **(산업 육성)**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 * 메타버스 서비스 실증(22년, 340억원) ** 컴퓨팅자원·데이터 제공, 콘텐츠 제작 지원(22년~)
- **(확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22년 2,332억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추진(23년)
 - * (부산) 패션·뷰티, (대구) 헬스케어·로봇, (대전) 국방·모빌리티, (세종) 미디어 등
 -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예 :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방통위, 2022. 8. 23.)

2022년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과감히 혁신

-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7개 → 3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
- 지상파 소유규제(대기업 기준, 경영 7%) 및 유료방송 경영규제 완화
- 허가·승인 시 마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기준 개선
- 지상파 종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를 상한 폐지 방안 마련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춘 법제 마련

-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 수립 및 법제 마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국제 OTT 포럼 개최 및 해외시장 이용행태 조사
- 지역방송 콘텐츠 글로벌 유통 지원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확대 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KBS의 경영평가 제도 및 재하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 도입
-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재난방송 신속성·접근성 개선

-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방송 대응체계 유지
- 지역 특성별 재난예방콘텐츠 보급,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기사 배달·노출 기준 검증 추진
- 뉴스재휴평가위원회 설치·구성 요건, 재휴심사 기준·절차 등 법에 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KBS 수신료 투명성 논의 지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구축

-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운영 지원
- 자율규제 관련 이용자 보호 평가 및 인센티브 도입

앱마켓 생태계 건전화

-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
-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이용자 중심 산업법 제도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 정비, 이용자 불편해소 및 권익 보호 강화
- 위치정보법 전면 개편, 위치 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국민 실생활 불편 사례 조속 해소

-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
-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 간소화 대상 확대
- 유료방송 가입정보 제공 강화

불법유해정보 등 디지털 폭력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를 유통 방지
- 불법스팸 전송자 제재 강화

전국민 미디어 접근성 강화

-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확대,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확대 보급
-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통신분쟁조정 인력풀 확대 및 조정기간 단축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규제혁신
우선 추진과제 발굴, 실시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 혁신
조직·인력 효율화

위원회 정비
법정위원회 50% 감축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 11.
최승재 의원안 등: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확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안: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한 신청인의 권리 보호 강화](#) 2021. 11.

[변재일 의원안: 집적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부과 근거 신설](#)
2022.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 등](#) 2021. 11.

[변재일 의원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현황 제출 의무 등](#) 2021. 4.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5. 4.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가 더 빨리 찾아왔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편리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험과 혼란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디지털 사회를 누리고 잘 살기 위해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칭)디지털청(또는 디지털위원회)을 설치하여 디지털 사회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인터넷 생태계 진화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가 칼럼」 2021. 1. 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6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 이상, 트래픽량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조치,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한 인터넷 연결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의 확보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는 과거에 비해 달라진 인터넷 환경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는 변화하는 인터넷 생태계 환경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신시장의 정책 수립에서도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 전환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시장환경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의 핵심인프라, '데이터센터'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세미나 2017. 8. 23.

발제자: 문종하(전남대학교, 교수), 박태완(과기정통부, 과장), 나연묵(단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경백(전남대학교, 교수), 이준기(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최준석(네온포토닉스, 부사장), 구지현(네이버, 이사), 박준호(LG CNS CTO IT센터운영팀, 부장), 이경완(SK, 팀장), 안경근(KT, 팀장), 권민석(삼성 SDS, 파트장), 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신혜권(전자신문, SW/IT전문기자)

라.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사업 활성화

개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 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통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와 민간인 지역조합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협력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7호에서 다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新)산업 육성과도 같은 맥락의 이슈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민관협력 사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과 수협중앙회가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p> <p>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4개도 및 106개 시군구에 이르고 이 중 농어촌 시군이 98개로 전체 시군구의 92.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에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는데 농어촌 지역이 특히 많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에 이를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침체된 지역경제는 또다시 생산연령인구의 유출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활력과 농어촌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바, 그 방안의 하나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 지역조합이 협력을 통한 사업이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농업 관계자들의 관심과 주</p>	2022-12-08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목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모델로 전남 영암군과 영암농협이 협력·추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가치를 확산시킨 유채·메밀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경남 함양군이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함양농협이 상품화 및 홍보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함양파(일명 “칼숫”) 재배사업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한 2건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재정·행정적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된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p>	
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p> <p>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난으로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現 수협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바젤Ⅲ 도입으로 인한 자기자본 충족을 위해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여 수협중앙회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수협중앙회는 2022년 4월까지 위 공적자금 중 4,007억원을 상환하였고, 2022년말까지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금 7,574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액면가 금 7,574억원의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교부하게 되며, 국채를 할인 매입하여 지급함으로써 해당 국채 현물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적자금을 일시에 조기 상환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그 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잔여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수협중앙회가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p>	2022-12-08 (수정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과제목표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120대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과제목표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산림 재해 대응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주요 내용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 (400개소 지원, ~'31년)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목재활용 촉진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 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주요 내용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 확대 추진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년)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

'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4] 지역균형 발전

◇ 지방 경쟁력 제고, 지방소멸위기 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

①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 **(초광역 메가시티)**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
 -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
 - * (예시) 지자체-대학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특례 최대 6년 지원 등
- **(강소도시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②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 **(지방이전 세제지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균특회계 역할 강화)**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 * (예시) 포괄보조금 지원규모 산정시 낙후도 비중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

③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지역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지원
 - *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확대 등
 - (교육)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등
 - (의료)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 지원 등
 - (주거·교통)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2.6월 제정, '23.1.1.부터 시행)에 근거
-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 여타 국가·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
- *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을 중심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원 지원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22. 8. 10.)

4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 개요

- 농촌은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및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확대

- 축사, 공장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 심화

* 농촌주거지 내 또는 100m 이내 축사 66천개소 (전체의 21%), 유해물질 배출공장 5,211개소 위치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통합 지원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농촌공간계획)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권별 주거·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 법적 근거로 「(가칭)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추진('22.말)

- 지자체(시장·군수)는 주민 의견을 수렴(주민협정* 등 체결)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

* (주민협정) 마을 또는 생활권 주민간 사업방식에 대한 약속(예, 지붕색깔 통일)

- (통합지원)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 시·군 계획 이행 지원

* (농촌협약)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약

- 주거지 인근 축사·공장 이전·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예산 통합 지원 → 농촌생활권 400개소 조성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괄보조 사업 및 농촌 삶의 질 관련 관계부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농촌생활권 조성 우수 사례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 ▶ 일자리 : 청년특화농공단지,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월급제 스마트팜
- ▶ 주 거 : 임대주택(100~200세대) 건립, 빈집 리모델링 추진
- ▶ 생활서비스 : 5분내 응급의료서비스,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어린이집 신축 등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해수부, 2022. 8. 11.)

해양수산부 |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1.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1. 수산업 지속가능한 생산, 유통·가공 구조 개선

- ☑ 자원관리형 어선어업, 스마트 양식업으로 전환
- ☑ 노후 위판장 현대화, 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정부비축량 방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2. 어촌 정주여건·소득·복지 개선, 귀어귀촌 확대로 자생력 확보

- ☑ 어촌 유형별로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新활력 증진사업" 추진
- ☑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23)
- ☑ 주거+일자리+기술 귀어귀촌 패키지 지원

3. 연안여객 도서주민 보편적 교통권 보장

- ☑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 지원

2.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1. 해운산업 민간 해운시장 활성화

- ☑ 민간투자 세제혜택 도입(조세특례 예타, '22.9), 정책펀드 확대(21→36억불)
- ☑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회사 설립('26)

2. 항만물류 스마트화,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 ☑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26),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포트('29) 구축
- ☑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설치로 부가가치 창출

3. 물류난 극복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지원

- ☑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 선적공간 제공, 수출기업 전용 화물 보관소 제공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해양수산부 누리집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 -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6. 29.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업 인력 부족, 농촌 지방소멸 등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 인구 증가 대책, 농촌 공간 개선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응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정부와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타 부처 소관의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3. 27.

최근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른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전체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생활여건과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 이상 주무부처나 해당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이 계획의 의의가 있다. 관련 부처 간의 실질적 협업,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관련 법령과 계획의 효과적인 연계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 9. 16.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적 사회변동과 다양한 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농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특히 농촌정책의 틀 안에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위상과 개선방안을 정립한다.

마. 나이 기준 통일

개요

나이 기준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p><u>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등).</p>	2022-12-08 (원안가결)
2	법제사법위원회	<p><u>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u></p> <p>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p>	2022-12-08 (수정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과제목표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주요내용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 중앙·지방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법무부, 2022. 7. 26.)

1 미래 변명을 이끄는 일류 법치

□ 추진배경

-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국가대체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변명을 뒷받침할 필요



□ 과제별 이행계획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

- ▲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 ▲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22. 6.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 전자 주주총회 도입 ▲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국 단위 조직 신설 추진)
- 【민법】 동물의 비물건화('21. 10. 법안 제출), 만 나이로 통일('22. 5. 법안 제출), 디지털콘텐츠계약,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규정 신설,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22 해) / 【상법】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입법추진('22 해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법제처 정책뉴스(2022. 6. 28.)



출처: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2. 6. 28.

참고 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2. 11.
박광온 의원안 등: 연령의 계산 및 표시방식 규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2. 11.
유상범 의원안: 연령의 계산 및 표시방식 규정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법제처 보도자료

[K-나이? 이제는 만 나이!](#)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만 나이로 나이 기준 통일을 위한 국민의견조사](#)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1. 11. 17.

■ 한국 사회에서는 출생에서 성년에 이르는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에 대한 보건, 보육, 돌봄, 교육, 보호, 규제, 지원 등의 법령과 행정규칙이 크게 증가해 왔음

■ 이와 같은 생애주기 단계별 법령과 행정규칙의 정책대상은 법률용어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중복과 혼란이 심화하여 왔다는 지적이 거듭됐던 것도 사실임
- 15개 부처 38개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에서 청년에 이르는 12개 법률용어에서 만연되어 있는 연령정의의 중복과 혼란은 (1) 같은 용어에 다른 연령정의, (2) 같은 연령정의에 다른 용어, (3) 연령 상한에서 ‘~17세’와 ‘~18세’의 혼재 등의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음

■ 한국의 개별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용어와 연령정의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부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정책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와 연령정의의 혼란을 지양하려는 노력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입법·정책 과제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1) 용어 및 용어의 연령정의를 표준국어의 사전적 의미와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여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 연령정의의 기술 준칙을 마련하고, (3)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연령정의를 도출하고, (4) 이상의 개선안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제3편 제3장 ‘법령 용어와 표현’에 규정하여 정부와 국회가 입안과 심사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